

천안함 사건 이후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 중국 외교 전략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현저하게 제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기존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미국과 본격적인 세력경쟁을 촉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은 여전히 체제 내에서의 점진적 부상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은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에서 선행되면서 동아시아발 미중 갈등이 향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비록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갈등이 본격적인 세력경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취약한 안보 구조를 지닌 한반도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중 관계의 변동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가 한국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강대국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독자적인 생존 공간을 확대하고, 국제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가야 한다. 그 출발은 우선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미니 다자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목 차

1.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대미 인식 및 전략의 변화
 - 가. 경제영역에서의 중국의 발언권 강화
 - 나. 중국 부상과 미국 변수
 - 다. 중국의 대미 인식
 - 라. 중국 부상을 위한 대미 전략: 제한적 국제규범 경쟁
 - 마.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전략
2.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의 대응과 미중관계
 - 가.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 대응의 배경과 논리
 - 나. 천안함 사건 이후 미중 관계 전망
3. 한중 관계와 한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
 - 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재검토
 - 나. 미중 갈등의 한반도 전이 문제
 - 다.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 회복

1.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대미 인식 및 전략의 변화

가. 경제영역에서의 중국의 발언권 강화

- 세계 금융위기는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 의지를 강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고, 실제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영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 행사도 강화되고 있음.
- 미중 양국관계에서 지난 30여 년간 유지되어 왔던 ‘미국 주도와 중국의 전략적 수용’이라는 기존 관성에도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 중국내에서는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실패와 미국 힘의 상대적 쇠퇴를 반증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호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¹⁾ 요컨대 세계 금융위기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 중국이 그동안 국제 정치경제질서의 개혁에 대해 공정, 합리, 평등, 호혜, 조화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담론을 제시하는 단계에 있었다면,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됨.
 - 예컨대 원자바오 총리가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특히 G-20 회의의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장은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화폐를 만들자는 제안도 하였음.²⁾
 - 중국 국무원은 2020년 이전에 상하이에 세계 무역 및 해운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여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세계 금융 센터를 건립하여 이를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암시.
 - 중국은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검증 등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

나. 중국 부상과 미국 변수

- 세계경제위기는 미중 관계에서 과거에 비해 중국의 상대적 목소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지만,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바로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과 미국과의 세력경쟁을 촉

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우선 중국의 부상은 여전히 기존 체제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상당기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예컨대 중국은 동아시아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 동반자관계의 확대, 그리고 다자주의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부상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내수시장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외의존도가 64%(2008)에 이르는 세계 제2위의 교역대국.
 - 중국은 창당 100년이 되는 2020년을 겨냥하여 ‘소강(小康)사회의 전면적 실현’, ‘사회주의 조화(和諧)사회의 구축’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의 비전을 설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국내 안정과 발전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의 평화적 부상’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구현하겠다는 것임. 이 시기 중요한 과제는 대내적으로 개혁·개방 30년의 과정에서 누적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저비용의 안정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가 존재.
-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있어 미국은 여전히 핵심적 협력 대상임. 뿐만 아니라 초강대국 미국은 상대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 부상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음.
- 예컨대 미국은 중국의 2대 교역국이고 최대 무역 흑자국인 동시에 중국의 지속발전의 동력원인 원유 수급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 즉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원유수입국으로 수요의 2/3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의 약 절반 정도를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석유 수송의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고 있어 미국의 절대적 영향권에 있음.³⁾
 -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 여부는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 요컨대 중국은 부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2020년까지는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현실.

중국은 창당 100년이 되는 2020년을 겨냥하여 ‘소강(小康)사회의 전면적 실현’, ‘사회주의 조화(和諧)사회의 구축’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의 비전을 설정하고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 여부는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

다. 중국의 대미 인식

- 중미 양국은 세계경제위기라는 같은 배를 타고 협력의 공감대(同舟共濟)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전략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갖고 있음. 즉, 중국에서는 세계경제위기가 미중 간 국력 격차를 축소시켰을 수는 있지만 G-2라는 명명을 통해 중국의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중국위협론의 변형으로서 ‘중국책임론’이라는 우려를 지니고 있음

적 불신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역내 미국중심 동맹체제의 강화, 9·11 이후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증대, 북한에 대한 압박,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의 견지 등 일련의 조치들이 중국의 주변 정세를 불안정하게 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근본적인 전략적 불신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음.⁴⁾
- 최근 미국이 한국, 아세안, 인도 등 중국의 인접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스스로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남중국해에 대해 클린턴 장관이 하노이 ARF 회의에 참석하여 남중국해에서의 자유항해권 보장 주장을 하여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은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G-2 또는 ‘차이메리카(Chimerica)’에 대해 중국은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이 역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갖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임. 중국에서는 세계경제위기가 미중 간 국력 격차를 축소시켰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국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른바 G-2라는 명명을 통해 중국의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중국위협론의 변형으로서 ‘중국책임론’이라는 우려를 지니고 있음.⁵⁾

라. 중국 부상을 위한 대미 전략: 제한적 국제규범 경쟁

- 중국은 한편으로는 대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중국의 노력이 결코 미국의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에 도전하거나 이익을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틈틈이 암시해 왔음.⁶⁾
- 중국의 미국 패권인정에는 단서가 있음.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미국이라는 패권국가와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임. 즉, 중국은 비록 미국의 패권적 지위자체는 인정하지만 ‘패권적 행태(hegemonic behavior)’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견제하고자 함.⁷⁾ 여기서 패권적 행태는 다른 아닌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중국의 부상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미국의 패권을 당분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임.

- 중국은 2020년까지 여전히 경제력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필적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이성적 판단에 근거할 경우 중국은 가능한 한 미국과 대결, 또는 갈등적 상황을 회피하려 할 것임. 특히 미국과 군사영역에서의 경쟁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임. 그러면서 경제, 환경 등 개도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개도국 대 선진국의 구도를 만들며 미국과의 국제규범을 둘러싼 경쟁을 시도할 수 있음. 따라서 중국은 향후 미국과 국제 규범제정(rule-making)을 둘러싸고 신중한 경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존재함.
- 중국은 이미 2천 년대 이후 국제기구의 후발참여국으로서 기존의 국제제도와 규범은 사실상 중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이며, 중국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음.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이 현 국제체제의 수혜자임도 부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국제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한 규범과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가자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⁸⁾ 2002년 16차 공산당 대회 보고에서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적시한 것도 중국의 국제제도에 대한 이러한 의지를 포괄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임.⁹⁾
- 중국은 국제규범과 제도 제정권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중국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될수록 국제 규범과 원칙을 둘러싼 미국과의 긴장도는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갈등은 중국이 부상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특히 경제영역에서부터 선행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마.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전략

- 중국은 어느 때보다도 세계 초강대국으로의 부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음. 그런데 부상을 위해서는 국내 체제안정과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고, 미국의 견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2020년까지 중국은 이러한 과제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집중하면서, 중국 부상의 지역 기반인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국 위상과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책임대국’으로의 부상을 기획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지역대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이행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음. 즉 중국의 책임대국의 출발은 동아시아

**중국의 미국
패권인정에는 단서가
있는데,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미국이라는 패권국가와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임.
중국은 향후 미국과 국제
규범제정(rule-making)
을 둘러싸고 신중한
경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존재함**

**2020년까지 중국은,
중국 부상의 지역
기반인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국 위상과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 적극외교를
통해 역내질서의
새로운 규범제정자로서
역할을 확대해 갈 것임**

- 지역임.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책임대국의 위상 확보는 이미지 형성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 국익과도 직결되어 있음.
- 중국은 경제발전, 체제안정, 변경지역의 안정, 대만과의 통일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안정적 외교 안보 관계의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주변 안보환경의 안정적 관리가 전제되어야 함. 실제로 중국은 최근 동아시아 인접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 FTA를 통한 경제협력의 전략화, 구조화, 그리고 ARF, SCO, 북핵 6자회담 등 지역 다자 안보협력 주도적 참여를 통한 적극적 포용정책을 전개해가고 있음.
 - 아울러 역내 미국 중심의 양자 간 군사동맹체제를 견제하고 장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제로서 역내 다자안보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접근은 중국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고, 주변국들의 중국위협론에 대한 경계를 완화시키면서 중국의 역내 부상을 추진해갈 수 있는 우회적 공세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중국은 이러한 적극외교를 통해 역내질서의 새로운 규범제정자로서 역할을 확대해 갈 것임. 최소한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의 대등한 지위와 영향력을 보장받으려 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시도는 일차적으로 경제영역에서 선행될 것으로 보임. 우선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강대국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동아시아 역내 통상규범, 위안화 국제화, 통상협력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해 갈 것임. 구체적으로는 위안화의 역내 통화강화, 동아시아국가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FTA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FTA의 전략적 의미를 강화해 갈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부상을 실현하기 위해 동아시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지향하고 있지만 만일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 공세를 취할 경우에는 중국 역시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 중국은 동아시아를 중국의 핵심 이해관계의 중심지역인 동시에 부상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음. 실제로 2008년도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동아시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39.7%,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투자 비중 역시 55.1%에 이르고 있음.

2.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의 대응과 미중관계

가.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 대응의 배경과 논리

- 천안함 사건과 이후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대응은 세계 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자아 정체성 의식의 제고, 경제영역에서의 발언권 강화 추세 속에서, 미국의 대중 포위에 대한 전략적 불신, 그리고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 부상의 선행적 실행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정의와 비정의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적 역학관계의 시각에서 보고 있음. 따라서 천안함 사건 자체의 실제 문제보다는 이후 전개될 갈등과 세력관계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중국의 이해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음.
 - 중국은 천안함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미 출구전략을 상정하고 있었으며, 가장 이상적인 출구전략은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의 재개임. 이는 이미 김정일 방중, 방중 전 다이빙귀-힐러리 전화통화, 그리고 방중 후의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중국이 일관되게 모색해 왔음.
 - 중국은 북핵 실험 이후 취한 제재 이상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임. 유엔을 통한 최소한의 상징적 조치를 선택한 이후 곧바로 상황의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가능한 한 조속히 6자회담의 재개를 추진하여 위기를 대화국면으로 전환시켜 안정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재차 한반도 문제에서의 중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 중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이 천안함 사건의 종결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고, 이어서 6자회담이라는 출구전략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음. 의장성명 10항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가 투영된 것으로 보임. 즉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그런데 의장성명 채택 이후 중국의 기대와 달리 한미가 대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을 전개하자, 중국은 한미가 인접지역인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나아가 북한에 대한 압박 이상의 의도, 그리고 일부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보임.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천안함 사건 자체의 실제 문제보다는 이후 전개될 갈등과 세력관계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중국의 이해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음

천안함 사건 이후**미중 간 갈등과****세력 경쟁이 동아시아****지역 안보 문제로****축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제시함. 천안함 사건과****이후의 일련의 과정은****중국에서도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핵심이익****확보와 미국의 역내****지위 인정을 어떻게****정립시킬 것인가에****대한 내부 논란을****야기했음**

-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항공모함의 훈련참여와 관련 자유항해권이라는 국제규범을 들고 나오고, 이어서 하노이 ARF에서도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공언한 ‘핵심이익’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임.

나. 천안함 사건 이후 미중 관계 전망

- 천안함 사건 이후 미중 간 갈등은 미중관계의 전망에 새로운 시사점을 주고 있음. 즉 미중 간 갈등과 세력 경쟁이 동아시아지역 안보 문제로 축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임.
 - 2001년 이후 지난 10년간 양자 간 문제의 성격을 지닌 대만문제를 제외한다면 미중 양국은 지역 안보문제에서 협조적 관계를 유지해 왔음. 특히 2003년이 북핵문제에 있어 양국은 기본적으로 6자회담, 유엔제재 등을 통해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음.
 -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미중관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이슈, 특히 중국이 국제금융질서, 환경문제 등에서 공세적 입장을 취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보여 왔음. 따라서 향후 글로벌 이슈가 미중 양국 간 협력과 경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했음.
- 천안함 사건과 이후의 일련의 과정은 중국에게도 분명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음. 중국에서도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핵심이익 확보와 미국의 역내 지위 인정을 어떻게 정립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부 논란이 야기된 것으로 보임.
 - 예컨대 군부를 중심으로 일부 강경세력들은 중국위협론을 무릅쓰고라도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와 대중 포위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즉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체고된 중국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아시아에서 사실상 중국의 부상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반면에, 중국 정책결정의 주류세력은 미국의 역내 지위와 영향력을 수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포용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관영매체의 논평을 중심으로 중국이 냉정을 되찾고 흔들림 없이 주변국가에 대한 선린우호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는 논조가 등장하고 있음.¹⁰⁾

- 다만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특히 중국이 이미 핵심이익으로 공표한 영토와 주권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지도부의 외교적 융통성은 제한되며 강경론자들의 발언권이 강화되면서 공세적 태도가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
- 결국 천안함 사건은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일정 정도 회복하는데 일조했다고 한다면, 중국은 중국대로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음.
- 반면에, 중국 지도부의 새로운 고민은 소위 강국몽(強國夢)과 중화민족주의를 통한 내부 결집력 강화와 체제 정당성 확보가 인접지역 국가들의 불안과 경계를 초래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지역 영향력 확대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임. 즉 중국은 부상을 위한 내부의 통합과 응집력 강화와 주변 국가들에 대한 매력 공세(Charm offensive) 외교사이의 불협화라는 딜레마를 안고 있음.
-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미중 간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갈등은 외형상 분명 지역에서의 세력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음. 자신의 지역기반을 확장하려는 중국과 전통적 지역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미국 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음.
- 세력경쟁의 속성을 보이고 있지만 본격적인 세력경쟁으로 인한 충돌로 발전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음. 미중 양국 모두 현재 본격적인 세력경쟁 국면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음.
- 특히 중국은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상당기간 동안 체제내의 부상을 진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필수적임. 아울러 2012년 10년만의 5세대 지도부로의 대대적인 권력교체를 앞두고 있는 중국에게 체제안정은 다시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미국 역시 이라크 철군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란 문제, 그리고 국내 경제회복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단일 제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대신, G2, G20 등 새로운 국제적 다자주의가 지구적 거버넌스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향후 미국과 중국 어떤 국가도 현실적으로 국제체제의 독점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임. 미중 양국이 현안별로 경쟁과 갈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미중 간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갈등은 외형상 분명
지역에서의 세력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음.
자신의 지역기반을 확장
하려는 중국과 전통적 지역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미국 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음**

한중 관계는 전략적 관계로 격상 이후 전략적 문제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이는 전략적 공감대 형성 및 신뢰관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해주는 것임

등을 지속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상호 상대의 지위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중국은 기존의 영토, 주권, 안보에 덧붙여 발전 이익까지 추가하여 소위 ‘핵심이익’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장시켜가고 있음.¹¹⁾ 즉 핵심이익론을 통해 중국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영토,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한 것임. 따라서 중국은 대만, 티베트, 그리고 나아가서 남중국해, 조어도 등 영해 영유권, 그리고 경제이익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은 확장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보다 적극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및 인접 국가들과 갈등이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음.

3. 한중 관계와 한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

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재검토

- 한중 관계는 전략적 관계로 격상 이후 오히려 전략적 문제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이는 전략적 관계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전략적 공감대 형성 및 신뢰관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해주는 것임.
 - 이는 일차적으로는 한중관계가 수교 이후 지난 18년간 외형적 양적 성장에 도취된 나머지 내실 있는 구조적 관계 발전을 소홀히 한 결과임.
 - 이러한 기본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인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불신과 경계심을 자극하면서 전략적 소통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천안함 사건에 집착한 대중국외교는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 장기적으로 중국의 부상 에 따른 한중관계의 비대칭성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기초체력 부터 새롭게 다지는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음.
 - 천안함 사건은 한국에게 있어 중국이 경제, 사회적 민간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임을 고려할 때 민간차원에서의 비우호적, 감성적 정서의 확산은 양국관계를 전반적으로 악화시켜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로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음.

나. 미중 갈등의 한반도 전이 문제

- 천안함 사건은 미중 갈등의 한반도 전이라는 문제와 함께 미중 간 갈등이 한반도에서부터 촉발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음. 천안함 사건은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기본적으로 각각 상대국 정책에 종속되어 있음을 재삼 실감케 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한반도가 미중 갈등과 세력경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외교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미중 갈등과 경쟁 구조 자체를 한국이 조정할 능력이 없지만 최소한 아직은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 전이되거나, 또는 한반도 문제로 인해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지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음.
 - 현재와 같이 한미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인하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미중 간 세력경쟁의 소용돌이 빠져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부상하는 중국이 한미동맹 구조 하에 있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음.
 - 부상하는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에서 신뢰를 강화시키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음. 즉 중국에게 한국은 경계와 견제의 대상으로 고착화되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강화되며,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와는 별도로 중국에 대한 적극외교가 필요함.
- 중국의 부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한국 역시 일정 정도 대중 전략적 지렛대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우려하는 인접지역에서의 중국위협론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어 한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중국이 갖게 해야 함. 한국이 중국위협론을 확대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보다는 중국위협론을 완화, 약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위치와 영향력을 지닌 국가라는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유사한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인접 국가들, 아세안, 서남아시아 국가 등과 전략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천안함 사건은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기본적으로 각각 상대국 정책에 종속되어 있음을 재삼 실감케 한 사례라 할 수 있음

**부상하는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에서 신뢰를
강화시키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한미동맹 강화와는
별도로 중국에 대한
적극외교가 필요함.
즉, 중국위협론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어 한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중국이 갖게
해야 함**

- 한국의 독자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확대시켜가는 노력도 절실한 시점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소(小)다자주의 네트워크(minilateralism)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능하다면 주도할 필요가 있음. 한중일, 한미중, 남북한미중 등 다양한 유형의 3자, 또는 4자 대화체를 참여 또는 주도하여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조성의 중재자, 매개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가야 함. 쌍무적 관계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긴요한 조정자로서의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자는 것임.
 -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한 한국을 만들어 전략적 위상을 높이고, 미국, 중국과 더불어 지역 및 세계적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향후 등장할 수 있는 미중 간 세력경쟁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임.
- 미중 간의 소프트 파워 경쟁이 심화되고 이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대비도 필요함. 미중 간의 국제규범과 원칙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경우, 이에 대한 한국의 보다 명확한 입장에 대한 미중 양국의 관심과 요구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
 - 한국은 사안에 따라 즉흥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규범과 원칙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기초를 확립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미중양국이 예측하고 나아가 양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이를 위해서는 미중 간의 국제 규범 경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현재시점에서부터 한국의 원칙적 입장을 마련하고 이를 양국에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다.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 회복

- 한국의 입장에서 미중 양국의 세력·경쟁적 속성이 북한문제에 투영되거나 또는 북한문제로 인해 세력경쟁이 격화되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임.
 - 미중 관계의 악화가 북한문제에 투영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할 밖의 상황전개이기 때문에 위험함. 아울러 천안함 사건은 북한문제로 인해 미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천안함 사건 이후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정세 변화를 주도하는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북핵문제, 천안함 사건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북한문제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동시에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전략적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음. 중국이 현재 비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부담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적지 않음.
 - 국내정치적 변수를 합리적으로 극복하면서 한국이 현재의 갈등 국면을 대화와 협력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중재자, 촉진자라는 국가이미지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모색하는 기반을 확보해 가야 함.
- 장기적으로는 북중 관계의 기복에 일희일비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축소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의 미숙한 외교적 대응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켰음. 반대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한국의 입지는 약화되는 역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향후에도 대북 제재에 중국을 견인하려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확대·초래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겨냥해서라도 중국을 대상으로 한국이 북한과 외교경쟁을 벌이는 듯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그보다는 포괄적 차원의 북한문제와 한반도의 장래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의와 소통 강화를 통해 전략적 신뢰를 강화시켜 가야함.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한국이 중국의 견제세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 있음.
- 중국이 북한에 대해 확보하고 있는 정보와 수단을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함.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북한에 대한 정보와 채널, 그리고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이든, 6자회담이든 한국이 나서 5자를 설득하고 주도하는 위치를 확보해야 함.

**천안함 사건은
북한문제로 인해
미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정세 변화를
주도하는 대안 모색 및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축소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길효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주석

- 1) 張家棟, “力量對比變化, 中美關係面臨新局面,” 『解放日報』, 2009年 3月 3日; 陳玉剛, “金融危機, 美國衰落與國際關係格局扁平化,” 『世界經濟與政治』, 2009年 5期.
- 2) 『한겨레』 2009.3.24.
- 3) Stuart Harris, “China’s regional policies: how much hegemon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9/4(2005), p.483.
- 4) Peter Hays Gries, “China Eyes the Hegemon,” *Orbis*, Vol.49, Issue 3 (Summer 2005), p.403.
- 5) 원자바오 총리는 2009년 5월 EU 정상회담에서 소위 G2론은 전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함바 있다. 『人民日報』, 2009年 5月 21日.
- 6) 샴보(Shambaugh)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중미 회담시 중국관리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존중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David Shambaugh, “Sino-American Relations since September 11: Can the New Stability Last?” *Current History*, Vol.101, No.656(2002), p.249. 아울러 2004년 중국 외교관과의 인터뷰에서도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David Shambaugh, “China Engages Asia.” *International Security*, 29(3) (2004/05), p.91.
- 7) Zhang Yunling and Tang Shiping, “China’ Regional Strategy,” David Shambaugh, ed., *Power Shift: China and Asia’ New Dynam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pp.52-53.
- 8) 門洪華, “國際機制與21世紀的中國外交戰略,” 胡鞍鋼 主編, 『中國大戰略』(杭州: 浙江人民出版社, 2003) pp.255-284.
- 9) 江澤民同志在黨的十六大上所作報告全文 (2002/11/17). <http://www.people.com.cn/GB/shizheng/16/20021117/868436.html> (검색일: 2009.10.20).
- 10) 凌德权, “冷观察周边海域事态,” 《瞭望》(2010-08-28) <http://observe.chinaaiiss.com/html/20108/28/a29ca7.html>
- 11)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은 “국가의 주권, 안전, 영토 보전 및 발전 이익(中国的核心利益是指国家主权、安全、领土完整和发展利益)이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7월 1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